

영·일동맹에 대한 연구*

정진오**

목 차

- | | |
|----------------|-----------------------|
| 1. 서론 | 6. 영·일동맹 조약의 내용(1-3차) |
| 2. 영·일동맹의 배경 | 1) 제2차 영·일동맹(1905) |
| 3. 일본의 입장 | 2) 1·2차 영·일동맹의 차이점 |
| 4. 영국의 입장 | 3) 제3차 영·일동맹(1911) |
| 5. 영·일동맹의 체결과정 | 7. 결론 |

1. 서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던 중 1902년 1월30일 영국과 체결한 영·일동맹은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영·일동맹은 이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관련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3차에 이르는 동맹조약이라는 국제정치적인 맥락이 있다.

본문에서는 이 두 부분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일동맹의 배경

일본과 영국이 아시아정치에서 지니는 공통적인 관심사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이었다. 1900년의 의화단사변이 진압된 이후 중국으로부터 철병한 러시아는 그가 지닌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그의 군대를 만주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러시아가 중국대륙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이야기다. 1858년 영·불 대 청국과의 전쟁이후의 愛璉조약에 의거 흑룡강주를 점령하였고 1860년의 북경조약(노·청조약)에 의하여 오소리강 이동 연해주를 영유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의화단사변 중에는 러시아의 극동합대를 파견하고 흑룡강 연안에 러시아의 도시를 건설하는 등 극동 경략에 적극적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만주의 군사점령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등장하였다.¹⁾ 그리하여 북경에서 만주에 이르는 철도의 부설에 관심을 가진 영국이나 산둥성에 있어서의 일반적 이익에 위협을 느끼는 독일에게 이제는 그 위협을 제거

* 이 논문은 2000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연구교수 지원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오기평, 『세계외교사』, 박영사, 1985. p. 253.

하기 위해서도 영·일 동맹이란 바람직하였다.

러시아의 만주 군사점령야욕이나 특수권익의 획득은 모든 나라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1902년 2월1일 미국의 헤이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만주경략은 종래의 문호개방정책에 모순임을 지적하고 이를 경고하였다.

이렇듯 서구 열강의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한 경각심은 컸으나 이에 못지 않게 일본의 대러시아 경계심은 대외 정책의 분열 까지도 초래 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반도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만주점령은 조선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이는 일본의 이익에 지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만주침략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외교정책의 선택문제가 되었다. 즉, 1901년에 성립한桂내각은 노·일 협상론과 영·일동맹론중 택일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첫째로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특권적 위치를 러시아가 승인하는 대신 일본은 만주에 있어서 러시아의 자유로운 경영을 승인하자는 협상론이므로 이는 만주나 조선을 교환하자는 안이다. 이른바 만·한 교환론이다.

둘째로는 러시아가 점차적으로 조선에의 침략을 구체화하고 또 노·일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이상 오직 실력으로서의 대응방안만이 있을 뿐임에 그를 위해서는 영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영·일동맹론으로 이는 첫째안과 대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일동맹주장은 3국간섭시 일본이 러시아에 당한 수모에서 쌓인 반감이 크게 작용하였고 반면에 영국은 3국간섭에의 불참국가이었으며 또한 같은 해운국이라는 점에서 영국과의 동맹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양론은 결코 상호배타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적이었으며 일본은 상당기간동안 두가지 안을 동시에 추진하였다.²⁾ 한편 영국이 '영예로운 고립'을 버리고 동양의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영국은 19세기말 수년동안 세계도처에서 열강과 충돌하였다. 수단에서는 프랑스와 만주에서는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군확장과 바그다드 문제로 독일과 대립하고 있었다. 또 보어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에 확산된 반영무드로부터 벗어나야 되었다. 아울러 영국군사력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영국으로서의 동맹국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었다.³⁾

3. 일본의 입장

러시아가 계속 만주에 주둔하게 되자 일본은 먼저 러시아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만주에서는 러시아의 특수권익을, 조선에서는 일본의 특수권익을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만한교환론'이 그것이었다. 이 논리는 이미 러시아가 여순·대련을 조차할 당시 니시 도꾸지로 외상이 로젠공사에게 제의한 바 있었다. 물론 러시아가 거절하였다.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자 일본은 다시 '만한교환론'을 들고 나왔다. 러시아 주재 공사인 고무라 주파로 외상인 아오키 슈조 등이 앞장을 섰다.

2) Ibid., p. 254.

3) 김용구, 『세계외교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 343.

그런데 러시아는 만주점령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조선을 중립화할 것을 일본에게 요구하였다. 만주를 배타적인 영향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인접지역인 한반도가 중립지역이 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901년 1월의 일이다.

고무라, 아오키 등은 만한교환론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러시아에게 만주를 영향권으로 인정해 주어도 언젠가는 조선에 대하여서도 같은 요구를 해울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만주와 조선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란 것을 깨달은 것이다.⁴⁾

물론 당시 일본국내에는 끝까지 러시아와의 교섭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었다. 이또오, 이노우에 같은 원로정치인들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상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세력에 대항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강력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앞서들은 고무라, 아오키 등은 물론이고 야마가타, 가쓰라 다로, 가또오 다까야끼등이 그 주축세력이었다.

따라서 1901년 6월 제1차 가쓰라내각이 성립되었고 외상에 고무라가 취임하였다. 이 내각의 최대 임무는 러시아에 대결하기 위하여 영국과 어떻게 교섭을 전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영·일동맹을 주장하는 강경론파는 비록 만·한 교환이 협정상 실현된다 하더라도 영토적 야심을 가진 로가 항구적으로 일본의 한국병합을 묵인할 리는 없을 것이고 만주에서의 세력기반은 명약관화한 추세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상호 무력으로 판결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극동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영국과 제휴하여 향후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더욱, 영·일의 제휴는 중국대륙에서 일본의 이권을 앞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⁵⁾

당시 청일전쟁의 승리, 삼국간섭, 북청사변등 연달은 충격적 제 국면과 권력지배층의 선도적 여론 조종 등으로 당시의 일본국민의 감정은 흥분된 쇼비니즘이 완전히 지배하여 정부에 대해서 대외강경책을 촉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로서 가장 곤란한 문제는 국가 재정의 취약성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연차적 군비 확충세력의 재원으로서 조세증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서민대중의 생활난으로 인한 중대한 정치적 불안요소를 잉태하고 있었다.⁶⁾ 이같은 취약한 기반에 입각한 국가재정상태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 호소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러시아 강경론자인 가또오 다까야끼나 고무라 슈따로도 국가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⁷⁾

4. 영국의 입장

영국은 그 영예스러운 고립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있었다. 이 정책은 국제정치의 모든 핵심문제가 유럽에 국한되어 있는 시점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러시아가 만주전역을 점령하고 철수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에게는 하나의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4) Ibid., p. 344.

5) 류수현, 『한국근대정치사』, 정음문화사, 1984, p. 143.

6) Ibid., p. 142.

7) Ibid., p. 142.

더욱이 청국-러시아간에 만주관계교섭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비밀합의가 있다는 끈질긴 소문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을 크게 자극하였다. 그런데 1901년 3월 독일 제상 빌로는 1900년의 양자합의는 만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여 영국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양자합의가 만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영국은 동북아문제에 있어서 동맹국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국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특히 주장한 그룹은 해군이였다. 해군의 견해로는 동북아 해역에서 러시아와 프랑스의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영·일동맹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무렵인 1901년 9월, 영국의 해군상인 셀번이 해군성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만일 미국이 모든 재원을 해군건설에 동원한다든지 또는 영국이 장차 프랑스·러시아 양국과 전쟁을 하는 경우 영국의 전통적인 '2국기준'정책은 계속 지탱할 수 없다.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다면 영국은 중국해역에 최소한의 해군력만 보유하면 될 것이다.

현재 이곳에 배치된 해군력을 보면 영국은 1급전함 4척, 순양함 16척이고 프랑스·러시아 양국은 1급전함 7척, 2급전함 2척, 순양함 20척 등이다. 만일 일본과 동맹하게 되면 이곳에는 영·일의 전함이 11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⁸⁾ 그리고 일본은 의화단 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의 육군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청·일전쟁의 배상금으로 그의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과의 군사동맹국이 되는데 적격이었다. 일본은 그의 육군력을 7개사단으로부터 13개 사단으로 강화하였고 해군은 5만톤의 함정을 20만톤까지 증강시켰다.⁹⁾ 이처럼 해군성 뿐만 아니라 랜스다운 외상을 위시한 외교관들도 일본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본에서나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양국간의 동맹추진 세력이 강력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5. 영·일 동맹의 체결과정

영국과 일본간의 접촉은 독일이 영국·독일·일본의 3국동맹을 제의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독일의 빌로 재상의 양자합의관계선언으로 영국·독일간의 관계가 긴장되자 영국과의 동맹론자인 에카르트슈타인 대리공사가 그런 3국동맹제의를 랜스다운 외상에게 제안하였다.

이 제의는 본국정부의 훈령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에카르트슈타인 개인의 구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간 랜스다운 외상, 에카르트슈타인 서기관 그리고 하야시 다다스 일본공사들은 3월~4월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수차 회담을 갖고 토의하였다.

그러나 4월 중순 독일 외무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홀슈타인이 3국동맹안이 독일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교섭중단을 훈령하여 문제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영·일 양국의 교섭은 그후 계속되었다. 1901년 6월 가쓰라 내각이 성립되었고 9월 에는 고무라가 외상에 취임하면서 양국간의 교섭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고무라 외상은 10월 초순 런던의 하야시 공사에게 동맹을 교섭하라고 훈령하였다. 이에 따라 하야시 공사는 10월 16일 랜스다운 외상과 최초로 공식적인 회담을 갖게 되었다.

8) 김용구. op.cit., p. 345.

9) 오기평. op.cit., p. 257.

이 회담이후 랜스다운 외상은 일본과의 동맹초안을 작성하여 10월 하순 영국내각의 심의에 부쳤다. 그러나 영국내각은 러시아의 태도를 보다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하여 이 초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영국은 일본과의 접근을 피하면서 동시에 이런 접근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러시아가 영국에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일본도 영국과 교섭하면서 한편 러시아와도 접촉을 계속하였다. 러시아 협상론자인 이또오가 러시아와의 직접교섭을 끝까지 주장하였다. 이또오는 예일대학창립 200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9월에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이 기회에 러시아에 들러 직접 러시아와 만주 조선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였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는 영국과의 동맹론이 우세하였으나 이또오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11월 중순 파리에 체재중이던 이또오에게 런던 주재공사 하야시가 동의를 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또오는 영국과의 동맹에는 원칙상 동의하지만 러시아와의 교섭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이 별로 없음을 간파하고 11월 초 일본과의 동맹을 결정함과 아울러 러시아와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결의하였다.

일본정부는 12월6일 원로회의에서 영국과의 동맹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한편 주영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이 한편에서는 대러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영·일 동맹교섭을 유리하게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桂수상에게 구신했던 것이다.

이또오의 대러협상은 과연 영국을 움직이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1901년 7월 16일 귀국 중이던 주일 영국공사 맥도날드는 주영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영국의 최고 수뇌자들이 영일동맹의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해왔던 것이다.¹⁰⁾ 9월 21일 외상에 취임한 고무라는 10월 8일 하야시 공사에게 영·일 동맹의 교섭권한을 부여하였는데 하야시는 10월16일 랜스다운 외상과 회담을 개시하였는데 11월 6일 영국 측으로부터 최초의 초안이 수교되었다.

이 최초의 영국 측 초안은 그 전문에서 「영·일 양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한국은 여하한 외국에 의해서도 병합될 수 없으며 청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하고 동국에 있어서 상업과 공업에 대해서 영·일 양국은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 특별한 이익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하의 동맹을 체결한다고 하였다.¹¹⁾

① 영·일 어느 쪽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타방의 동맹측은 중립을 지키고 다른 국가가 가담해서 참전하는 것을 저지할 것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이 적국에 가담하여 참전하는 경우 타방의 동맹국도 참전하여 협동작전을 한다. 그리고 강화도 상호합의하면서 행한다.

③ 영·일 양국은 상호협의를 없이는 전문에 제시된 이익에 관해 타국과 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④ 양국은 상기의 이익에 위협이 박두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십분 격의없는 협의를 할 것. 그리고 별관을 추가해서 양국 해군은 평시에 있어서도 되도록 협동할 것을 규정했다.¹²⁾

이와 같은 영국 측 초안에 대해 일본은 상호 공수동맹에 있어서는 지극히 만족하였는데 그것은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하는 경우 프랑스가 영국과 대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러시아에 가담, 참전할 수 없으며 영일 동맹으로써 러시아에 가담할 국가는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삼국간섭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완전히 없어졌고 영국으로서는 이 동맹으로

10) 류수현, op.cit., p. 144.

11) Ibid., p. 144.

12) Ibid., p. 144-5.

해서 극동에 있어서는 일본의 무력을 앞세워 수수방관하고서도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데 만족했다. 그러나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일 동맹을 체결하는 것도 필경은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그 궁극적 목적인 이상 영국 측 안의 「한국이 여하한 외국에 의해서도 병합될 수 없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 된다」는 전문 취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영국 측 초안에 대해 일본측의 수정안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동아”를 “극동”으로 수정하고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여하한 외국에 의해서도”를 “다른 국가에 의해서”라고 수정하였다.¹³⁾ 즉 “다른 국가에 의해서”라고 한 것은 영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 의해서는 병합될 수 없고 영국과 일본에 의해서는 병합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현상유지라는 구속적 표현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남으로써만 한국병합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별관을 설정하여 “영국은 일본이 현재 한국에 있어서 가지는 우세한 이익(preponderant interests)을 옹호 증진하기 위해 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함”이라는 1개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본문을 공표하지만 별관은 비밀로 해두는 것이 어떤지”하고 영국 측에 타진해 보았다. 즉 표면상은 영토보전과 현상유지를 내세우고 뒤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현상타파를 겨냥한 것이 일본측 수정안의 골자이었다.¹⁴⁾ 이와 같은 일본측 수정안에 대해 영국 측에서 재수정안을 제시해왔다. 즉 영국이 일본측의 한국에 관한 별관(제3조)규정을 승인한다면 일본은 사실상 한국에 있어서 자유행동으로 나올 수 있고 그 결과 일본이 한국에서 침략행동으로 나오면 러시아와의 충돌은 필연적이고 이렇게 되어 야기되는 극동의 국제분쟁에 영국이 개재되는 것은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 청일전쟁만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지배를 위한 노골적인 탐욕에서 도발되었음은 국제적으로 주지의 사실로서 일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영국정부가 이와 같은 일본의 요구를 승인한다면 의회와 국민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영국정부로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 러시아 견제를 해주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로서도 일본의 가장 절실한 욕구를 전혀 무시한다면 동맹자체가 처음부터 성립치 못할 것이며 기왕 일본이 한국에서 행사하고 있는 우세한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2년 1월14일 하야시 공사에게 제2차 영국 측 수정안이 교부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제1조를 설정하여 「영·일 양국은 청·한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전혀 하등의 침략적 의사를 갖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서 가지는 정치상·상업상 또는 공업상의 특별한 이익 그리고 영국이 청국에서 가지는 특별한 이익에 “다른 국가의 침략적 행동에 의해서 침박될 경우”는 각자의 이익옹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일본 측 수정안에 있었던 한국에 관한 별관(제3조) 즉 「영국은 일본이 현재 한국에 있어서 가지는 우세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해 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함」이라는 별관을 삭제하였다.¹⁵⁾ 일본은 이 시점에서 한국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규정을 요구한다는 것이 곤란하고 실현될 가능성도 없음을 알고 다음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즉 「다른 국가의 침략행동에 의해」를 삭제하고 「이익이 침박될 경우」라고만 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침략행위에 의해서”라고 규정한다면 다른국가의 침략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즉 전쟁을 할 수 없고, 전쟁을 한다 해도 이는 동맹조약에 의해 상호 구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을 배제하고 막연히 “이익이 침박될 경

13) Ibid., p. 145.

14) Ibid., p. 146.

15) Ibid., p. 147.

우”라고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측의 수정안에 대해서 영국측은 역시 난색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침략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국내의 무질서”에 의해 이익이 침박될 경우 각자의 이익옹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내의 무질서 즉 내란의 경우는 추가했는데 이는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일제의 침략정책에 한국민이 필연 항거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익의 침박으로 보고 한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자는 것이었다.¹⁶⁾ 영국 측은 일본이 한국내의 무질서를 구실로 내정 간섭하여 이를 무력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일본의 내심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중국에 있어서도 의화단 사건과 같은 반항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보면 이러한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일본과의 협조도 또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측의 이 수정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901년 10월 16일부터 하야시 일본 공사와 랜스다운 영국의상과의 위와 같은 일련의 교섭을 타결하여 1902년 1월 30일 런던에서 제1차 영·일 동맹(Anglo-Japanese Alliance of 1902)의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6. 영·일 동맹조약의 내용(1-3차)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영·일 동맹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문과 전문 6개로 된 조약에는 양국이 그간에 제의했던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다.

우선 전문에서는 그 서두에서 양국은 극동에서의 평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고 나서 청국과 조선의 독립 및 영토보전 및 양국에서의 영·일의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을 지적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청국과 대한제국의 독립을 영·일은 승인하고 영국의 청국에 대한 그리고 일본의 청·한에서의 특수이익을 제3국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조에서는 제1조에서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제3국과 전쟁이 개시되었을 때 타방은 엄정중립을 지킬 것에 합의하였다.

제3조에서는 수 개국과 전쟁시에는 협동전투를 약속하였다.

제4조에서는 상호협의를 없이 제3국과 별약을 금지한다.

제5조는 일본과 영국의 이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상호통고한다.

제6조는 5년간 유효기로 하였다.¹⁷⁾

위와 같은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양해사항을 서한으로 교환하였다. 첫째로는 양국의 평시의 해군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호협조하기로 하고 일방의 항만에서 타방의 함정에 대한 수리, 채탄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둘째로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특수이익이나 영국의 양자강 유역에서의 이익 및 이를 둘러싼 로·일간의 충돌가능성 등에 관련된 문제들은 조약 제1조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셋째로는 조약의 적용범위(지역)문제에 있어서 영국은 이를 인도에 까지 적용시키기를 바랐으나 일

16) Ibid. p. 147-8.

17) 오기평. op.cit., p. 259.

본은 이렇게 될 경우 제3국에게 의혹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용지역은 극동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넷째로 조약의 공표문제에 있어서 영국은 주저하였으나 청·한의 영토보전이나 독립의 확인이 어느 특정국가에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 30일에 조인하고 2월 11일에 공포하였다.¹⁸⁾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극동에 배치되는 해군력의 조절문제이었다. 일본이 20만 톤, 영국이 17만 톤으로 영·일 동맹의 해군력이 37만 톤이었음에 비해 러시아는 12만 톤, 프랑스는 8만 톤으로 총 20만 톤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자국의 극동해군력을 감소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러시아의 증대 추세 때문에 상비군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¹⁹⁾ 이렇게 체결된 영·일 동맹조약은 동서양 강대국세력이 결합된 첫 번째의 계기를 이루었다는 데에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이를 세분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흥일본은 기성강대국인 영국과 동등한 공수동맹의 당사국이 되었다. 더구나 이로써 일본은 조선에 대한 그들의 특수 이익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영·일 공히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그로부터 2년 후에 발발한 노·일전쟁에서 노·불 동맹을 동결시킴으로써 일본의 승인을 구성하게도 되었다.

영·일 동맹은 맨 처음 그 가상적을 분명히 러시아로 설정하였으나 노·일 전쟁 후 1905년 그리고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부터 그 목표는 차츰 러시아로부터 독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극동경략이 정치적으로 일본 및 영국의 이익과 상충하기 시작하였고 영·일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이를 견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영국의 접근에 대하여 러시아는 지난날 3국 간섭의 당사국들인 독일 및 프랑스와 더불어 그들의 대륙동맹(Continental League)을 부활시키려 시도하였으나 이는 노·불 동맹이 지속하는 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는 독일의 반대에 봉착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1902년 3월에 일방적으로 노·불 조약을 극동에 연장·적용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국제정세의 변화의 결과였다.

1) 제2차 영·일 동맹(1905)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영국은 일본의 실력을 충분히 인정하게 되었고 영·일 동맹의 적용지역을 인도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갈구하였다. 러시아세력을 아시아에 못박아 두자는 독일의 의도는 영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영국과 일본의 협상은 시종 비공식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영국이 일본의 대한 우월권을 인정해 주는 대상조건이 주요하였다. 한편 일본으로서도 비록 대 로전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계속적인 러시아의 복수전에 대비키 위해서는 영국과의 동맹은 필요한 장치였다.

그에 앞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이권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확보되었다. 우선 1904년 2월 22일의 한일의정서, 10월 5일의 재정고문 초빙계약 그리고 1905년 4월 11일에 맺어진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의정서 등을 통하여 이미 실질적인 특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들 내용을 영국으로 하여금 인정케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은 영·일 동맹조약을 인도에까지 확장·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18) Ibid., p. 259-260.

19) Ibid., p. 260.

다만 제1차 영·일 동맹조약에서 약속한 공수동맹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적국이 1개국일 경우에도 원조의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 1905년 5월 23일부터 시작된 회의를 거쳐 8월 12일에 조인되고 9월 27일에 공표되었던 제2차 영·일 동맹조약은 다분히 제1차 영·일 동맹 조약의 개정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내용상의 차이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를 요약·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1·2 차 영·일동맹의 차이점

첫째로 제1차 영·일 동맹조약은 적용범위를 청국과 한국에 국한시켰으나 제2차 영·일 동맹조약은 그 범위를 인도에까지 확장하였다.

즉 영·일 양국은 동아시아 및 인도지역에서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청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과 그 곳에서 열국의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의 확보를 공동책임사항으로 약속하였다.

이는 제1차 영·일 동맹조약에서 청국과 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의 의무를 지웠던 것과는 달리 제2차 영·일 동맹조약에서는 한국조항을 삭제하여 버리고 오직 청국에 대한 보장만을 약속함으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둘째로 상술한 내용을 아주 구체화하여 1차에서는 단순히 일본의 대한 특수이익이었으나 제2차에서는 영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조치를 승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후자의 특권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

셋째로 공수동맹조항을 강화한 것으로서 1차 조약에서는 체약국의 일방이 2개국 이상의 국가와 전쟁을 할 경우에 타 체약국은 원조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공수동맹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3국과의 강화도 체약국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게끔 하였다.

넷째로 제8조에서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제1차 영·일 동맹조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던 것과는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²⁰⁾

제2차 영·일 동맹조약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랜즈다운외교는 영국 내 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영국이 항상 걱정하고 있던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따른 인도에의 침입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다시 그들의 관심을 구주로 향하게끔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과의 협상과 계속적인 일본과의 협상으로 발전되었으나 역시 러시아의 아시아에서의 이익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일본은 전후에 필요한 자금을 영국으로부터 기채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외자는 필요한 군사비 이외는 전부 남만의 철도건설과 경영에 투자하였다. 제2차 영·일 동맹조약의 보장조항으로부터 탈락된 한국은 조약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당시의 국제상황 속에서 무위로 끝나게 된 것은 대세이었다.

3) 제3차 영·일 동맹(1911)

1902년과 1905년의 두 차례에 걸친 영·일 동맹은 서로의 필요성에서 나온 유대이었으나 시간의 흐

20) Ibid., p. 281.

름에 따라 그 사정은 차츰 변화되었다. 10년 유효기간으로 체결되었던 제2차 영·일 동맹조약은 영국의 대일 우호감정이 노·일 전쟁을 계기로 그 절정에 달했을 때 이루어졌으나 로·일전 이후 10년이 되기도 전에 사정은 변화되어 그 호감은 점차 재고케 되었다.

영국이 영·일 동맹의 가치를 차츰 재고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일본과 영국의 협상체제의 진전이었 다. 즉 영·일 동맹조약의 가상적이었던 러시아에 대해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성립시켰고 영국도 이란의 분할과 티벳 문제를 놓고 영·러 협상(1907)을 이룩한 마당에 영·일 동맹의 존재이유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로·일 전쟁후 일본의 산업화는 중국 시장에의 진출을 필요로 하였고 일본의 대 만주 정책은 비록 문호개방, 기회균등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자연히 영국을 배척하는 정책이 되었다. 여기에 영국의 대일 감정은 차츰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셋째로는 영국과 미국이 지니는 밀접한 관계로 영·일 동맹의 실효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과는 불가분리의 절대적인 유대를 지니고 있던 영국은 1906년이래 이민 문제와 또한 만철문제 로 인한 미·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을 자극하였고 만일의 경우 미·일의 개전시 영·일 동맹의 운명에 대한 비판론을 낳았고 심지어는 그 동맹의 불필요론 까지 대두케 되었다. 또한 영연방의 자치영들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지에서 배일운동 이 격화됨으로써 영국은 상당히 불안하게 되었다.²¹⁾

그러면서도 영국에게 있어서 일본과의 동맹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었다. 우선 영국을 가상적으로 한 3국 동맹의 주축국인 독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건합경쟁은 시작되었고 독·로관계는 개선되어가고 있었으며 만약에 영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폐기할 경우 영국은 일·로·독 3국의 결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영국은 일본의 조선국 병합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폴링 회사건에 대해서도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영국의 친일태도를 견지하였다.²²⁾ 한편 일본으로서도 그의 외교정책의 근간은 아직도 영·일 동맹이며 이는 동양에서 일본의 특수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나 또한 그의 러시아와의 관계속에서 대륙진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이었다.

제3차 동맹조약은 러시아·일본 전쟁이후 만주에서의 미국·일본의 대립, 1907년 영국·러시아 협상의 성립, 영국·미국간의 총괄적인 중재조약의 체결 등의 사정으로 제2차 영·일 동맹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미국을 영·일 동맹조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국·러시아 협상의 성립으로 인도관계 규정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911년 7월에 성립된 제3차 영·일 동맹조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체약국의 일방이 제3국과 총괄적인 중재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약국은 제3국과 교전할 의무는 없다.

② 조선관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한·일 합방이후의 일이니 당연한 것이었다.

③ 인도관계 규정도 삭제된 것은 영국·러시아 협상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④ 10년간 유효하기로 규정하였다.²³⁾

영·일 동맹은 결국 워싱턴 회의중인 1921년 12월에 체결된 '태평양도서 4국 조약'으로 종료되었다.

21) Ibid., p. 282-3.

22) Ibid., p. 283.

23) 김용구. op.cit., p. 350.

이 4국 조약의 발효일자가 1923년 8월이므로 영·일 동맹은 무려 20년 6개월 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 오랜 기간 이 동맹조약은 양국의 외교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2차 동맹 이후로는 프랑스, 일본협약, 러시아·일본협약, 영국·러시아 협상, 미국·일본간의 갈등으로 그 의의는 크게 감소되었다.

7. 결 론

영·일 동맹은 영·일 양국의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키 위해 체결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체결한 것이다. 이로서 신흥일본은 기성강대국인 영국과 동등한 공수동맹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조선에 대한 그들의 특수이익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영·일 동맹은 러·일 전쟁 후 1905년 그리고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그 목표는 차츰 러시아로부터 독일로 옮겨지게 되었다. 또한 이처럼 강대국들이 한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때 한국은 이에 대해 잘 모른 채 아무런 대내외적 대응책이 없는 가운데 망국의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가는 특히 강대국의 정세를 민감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